

“반도체 훈풍에 수출 반등”... 올해 경제성장률 2.8% 전망

금융연구원, 기존보다 0.7%p 높여
설비투자 확대가 회복세 뒷받침
ICT 품목 호조에 대외 여건 개선

고유가 장기화에 물가 부담 커져
중동 리스크에 전망 불확실성 고조

금융연구원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2.8%로 전망했다.

기존 경제성장률 전망치(2.1%)보다 0.7%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확대되겠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순수출 및 설비투자가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연구원은 11일 '2026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11월 제시한 전망치(2.1%)를 상향했다.

김현태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우리는 호르무즈해협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로 중동지역이 전체 수입의 55%를 차지한다”며 “고유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망 시계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이 '2026년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나누리 기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 실장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1.9%로 내다봤다. 1분기에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가 위축되었지만, 2분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112.1로 상승하며 2020년 이후 두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현재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100

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인 심리를 나타낸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1.5%로 관측했다.

김 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며 일부 건설자재 공급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점차 유가 급등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3~7개월 시차를 두고 건설자재가격으로 전가된다. 원유조달 차질로 인한 공급 불확실성이 하락요인으



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4.7%로 반등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2022년 이후의 부진에서 벗어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총수출 증가율을 6.3%로 높게 전망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컴퓨터 기억장치(SSD포함) 및 이동전화기 수출물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0%, 150% 증가했다. 반도체 이외의 정보통신기술(ICT) 품목들도 전반적인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총수출 증가율이 6.3%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과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충격 당시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IT부문의 수출 물가가 하락 국면을 지속했다”면서도 “이번에는 국제유가 상승여파로 IT 이외 수출물가가 전월 대비 15% 상승하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IT 수출물가도 10.1% 증가하며 수출물가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상방압력과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국내경기 개선 등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공급 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길어지고 반도체 부문 호황에 따라 경기가 개선되면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나누리 기자

ysl115@metroseoul.co.kr



환율 1470원대에 물가 경고등... 한은, 금리 '인상' 가능성 고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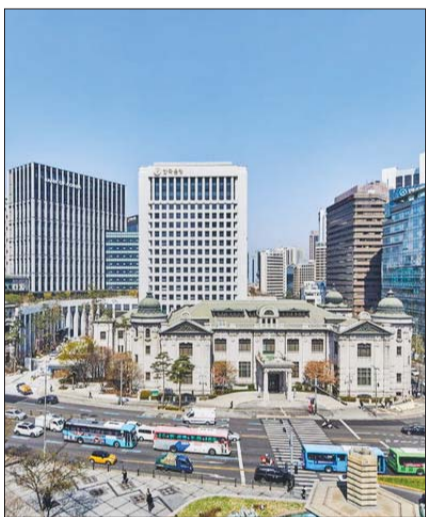
경상·무역 흑자에도 원화 약세
중동 리스크에 달러 선호 겹쳐
소비자물가 2.6%로 부담 확대
내달 금통위 금리 경로 주목

물가와 환율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선택도 인하보다 인상 가능성 점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지만 다시 1470원대로 올라섰다.

11일 한국은행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373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4월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48.0% 증가한 858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고, 무역수지는 237억7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과 경상수지만 놓고 보면 원화 강세 재료가 쌓인 셈이다. 하지만 외환시장의 흐름은 반대다. 지난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7원 오른 1471.7원에 마감했다.

문제는 반도체가 성장을 떠받칠수록



고환율, 고물가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한은의 금리 인하 명분은 약해진다. 당초 중동 사태 장기화는 유가 상승을 통해 물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성장률을 낮추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 하방압력을 방어하면서 통화정책의 무게추는 경기 방어보다 물가안정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물가 지표도 한은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전월 상승률 2.2%보다 0.4%포인트(p) 높아졌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와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도 각각 2.2% 올랐다.

한은도 물가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한은은 4월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0.4%p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고유가와 고환율이 수입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는 국면이다.

◆ 환율이 물가 부담 키워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에도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무는 것은 중동 리스크와 글로벌 달러 선호, 외국인 자금 흐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경로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환율이 높은 상태로 길어지면 한은의

금리 선택은 더 복잡해진다. 원화 약세는 수입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석유류·공업제품·서비스가격을 거쳐 체감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특히 유가 충격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경우 한은은 성장보다 물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더 크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한국은행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환율 수준에 대한 직접 평가는 피하면서도 중동 사태를 핵심 변수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중동 전쟁 상황이 얼마나 빨리 안정화되느냐가 가장 키포인트”라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정책조합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 성장률 달성 의지도 유지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의 변동성이 커 지금 시점에서 성장률을 전망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초 약속한 2.0%는 어쨌거나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 5월 금통위 '점도표' 주목

유상대 한은 부총제도 금리 인하 사이

를 이후의 경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유 부총재는 사마르칸트 기자간담회에서 중동발 충격 이후 물가 상방 압력은 커진 반면 성장세는 예상보다 크게 꺾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재는 “금리를 인상 내지는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5월 금융통화위원회까지 현재 상황이 확인된다면 2월 점도표보다 금리 경로 확률분포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이는 당장 5월 금리 인상을 예고한 발언이라기보다, 성장·물가·환율 조건이 바뀐 만큼 향후 금리 경로 상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 부총재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5월 금통위까지 상황을 더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전기차,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구독... 10월부터 현대차 2000대 실증

국토부, 모빌리티 특례 16건 승인
초기 비용 낮춰 전기차 보급 확대
리스사 회수·재사용해 요금 완화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구독 형태로 빌려 쓰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초기 구매 문턱을 낮춰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긴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자' 등 16건의 실증특례 안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규제 샌드박스라고도 부른다. 최대 4년간 실증 기회가 주어지며 성과가 입증되면 정식 제도에 편입된다.

이번 특례에는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안이 포함돼, 소비자가 배터리를 빌려 쓰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해 초기 구매 부담이 큰 편이다. 배터리 소유권을 가진 리스사에 월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 허용되면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초기 구매비용을 월 사용료로 나눠내는 점에서 구독 서비스가 조삼모사식 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어 배터리 잔존가치 만큼 구독료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스사를 중심으로 배터리 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대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를 활용한 대규모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원래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자동차 제조사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연구·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의 경우 자기인증 취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

부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 차량이 자기인증 없이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 등에 대한 특례도 함께 의결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이번 실증 특례와 관련해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와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